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5. 25. ~ 6. 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4인은 대전광역시의 회의원 2인과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대전광역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신설 1993.6.1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1.11.30, 1993.6.11>

제23조 삭제<2001.7.24>

※ 삭제전 내용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①공무원·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전문개정 1993.6.11]

○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
(안 제4조 제2항)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
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
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
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
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
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신설 1994.12.31, 1997.12.31, 2006.12.28>

-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 ⑧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 ⑩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6>
- ⑪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⑫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31>

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 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 받은 자는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6.12.28>

⑭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6.12.28>

⑮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6.12.28>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 또는 오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2006.12.28>
-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2006.12.28>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7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 2의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 2의3. 제8조제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 7의2.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7의3. 제1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7의4.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
 - 7의5.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
 - 7의6. 제14조의10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 [전문개정 1993.6.11]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본조신설 1993.6.11]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2.31,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②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4.12.31, 2001.1.26, 2005.5.18>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본조신설 1993.6.11]